

‘살 붙이는’ 구조조정-경쟁력 있는 기업 집단의 육성

- 부적격 업체 난립으로 인한 악순환의 연결고리 끊어내야 -

김 태 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왔다. 시공능력평가 150위 이내 기업들 가운데 현재 25개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에 비해 건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의 칼날이 날카롭게 가세하고 있다. 이제 개별 기업 차원에서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살을 붙이는’ 구조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내 또는 다른 산업 간 구조조정으로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산업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인 동태적 비교우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생산 구조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둘째, 산업 내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 건전성을 확충하려는 산업 차원의 노력이다.

셋째, 기업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지만 부실기업의 조정 차원을 넘어 산업 차원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산업 발전 전략이므로 소극적인 고용과 투자의 조정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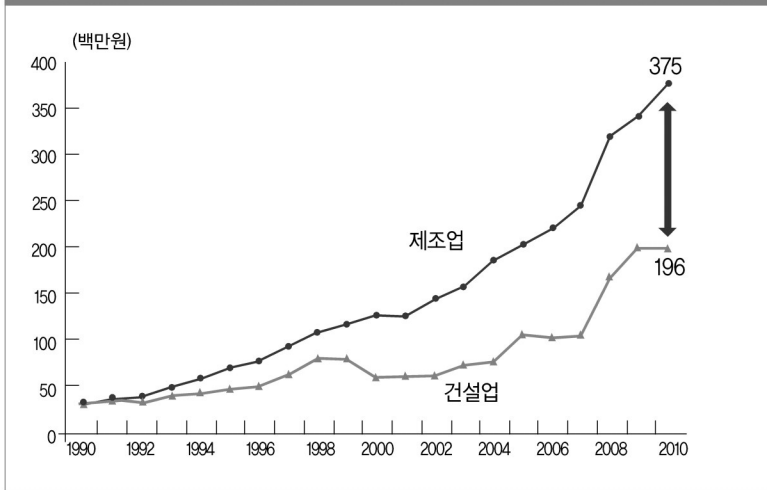
악순환의 단초 - 부적격 업체 난립

2003년 이후 건설산업의 생산 규모는 GDP 대비 1991년 11.2%에서 2011년 7.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고 전체 산업 대비 취업자 수 비중도 1997년 9.6%에서 2011년 5.9%로 낮아졌다.

1980년대부터 경기 하강기마다 토목부문이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세를 완만하게 유지해 왔다.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제조업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2003년 0.6% 포인트에서 2011년 -0.3% 포인트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림 1〉 취업자 1인당 매출액 비교 추이



자료 : KIS-Vaive.

〈표 1〉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조사 현황

구분	1차 (2008.6~7)	2차 (2008.9~12)	3차 (2009.11~ 2010.11)	4차 (2011.1~6)	5차 (2011.9~12)
조사 대상 업체수	819	3,065	3,086	3,212	2,372
등록기준 미달 업체수	686 (83.80%)	2,077 (67.80%)	1,394 (45.20%)	1,645 (51.0%)	1,291 (54.4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같은 기간에 제조업체 수가 거의 정체 상태를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19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이 촉진제가 되었다. 또한 지난 15년 간 제조업의 기업당 부가가치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건설산업의 경우는 정체된 상태이고 기업당 수주액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취업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제조업이 3억 7,500만원인 반면에 건설업은 1억 9,600만원으로 1998년부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그림 1〉 참조). 특히 중견 건설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건설 경영 여건의 악화로 인한 부적격 업체의 난립은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를 유발하고 건설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동반 부실과 경영 여건 악화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55~60%에 해당되는 6,400~7,000개 업체는 등록기준 미달의 부적격 업체 또는 불법업체(불법 하도업체, 등록 대여 업체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하면 건축공사업 등록의 최저요건인 자본금 5억원과 기술자 5인 보유를 근거로 살펴보자. 연간 최소소요 비용은 자본금의 이자 부담(이자율 4% 가정)과 기술자 인건비(3,000만원 가정)로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이익률 6%를 고려하면 연간 총매출액은 적어도 28억 3,000만원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5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부적격 업체의 퇴출 장치가 미흡한 것은 먼저 시장 진입 단계에서 등록요건이 느슨하여 허위 등록이 용이하고, 입찰 단계에서 보증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발주제도가 변별력이 낮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공사관리 단계에서도 불법적인 일괄 하도급 관행이 잔존하고 품질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부적격 업체의 선별과 퇴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 이 슈 진 단

건설투자 비중 감소세도

1970~2007년 OECD 회원국들의 GDP 수준과 건설산업 비중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비중이 완만한 우하향세를 나타냈다.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건설 인프라 수요가 증대하지만 성숙기에는 인프라가 완비되어 건설투자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1990년 대부터 건설산업의 비중이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였다. OECD 회원국들의 건설투자 비중이 1인당 GDP 1만 2,000~1만 3,0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한 후 1만 5,000달러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현상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부적격 업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인 양적 조정과 중장기적인 질적 조정을 병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먼저 부적격 업체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건설 입찰 제도의 1회성 게임 특성을 이용한 부적격 업체의 퇴출과 진입을 차단하고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를테면 업체의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인력 등록 기준으로 시공 경력이 있는 기술 인력 비중을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화하고 등록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시행해볼 수 있다. 건설 정보망(KISCON)을 활용하여 원·하도급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시공 비율과 직접시공 계획 불이행 항목을 활용하여 가감점제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 또한 발주 방식과 심사 기준에 대한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랜 숙제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 집단 육성해야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목적은 경쟁력 있는 우수 업체를 육성하여 산업의 뼈를 깎을 것이 아니라 '살을 붙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건전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집단을 육성해야 하고 적극적인 인수·합병(M&A) 활성화로 업체 수 조정과 사업 구조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발주 방식에서는 종합적인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수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최고 가치를 지향하는 종합 평가(가격, 공사수행 능력, 기술력 등) 방식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따라 종합평가,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등 다양한 발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업체가 차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도시재생 사업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구조물 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과 결합한 신규 건설 수요 발굴에 집중해야 하며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첨단 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과 국내 시장의 중견기업 활동 활성화로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실천 과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건설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액 장학금 지원 수준의 직업 전문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설립 추진도 혁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CERIK